

이덕일의 '역사의 창'



검찰 개혁은 선택 사항 아니다

바근데 정권에서는 검찰에 대한 국민의 성도가 일상적이었는데, 현 정권 들어서 조금 잠잠해진 형국이다. 검찰을 믿어서가 아니라 현 정권이 공비처(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지켜보는 중일 것이다.

조선초 500여 년 동안 권력형 비리가 드물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대간(臺諫)이 제 기능을 수행했기 때문이었다. 사헌부를 대간(臺官), 사간원을 간관(諫官)이라고 하는데 두 기관을 아울러 대간(臺諫) 또는 양사(兩司)라 했다. 수사권·언론권·탄핵권이 있는 사헌부는 지금의 검찰과 비슷했고, 수사권은 없지만 언론권·탄핵권이 있었던 사간원은 지금의 감사원과 비슷했다.

조선의 기틀을 세운 삼봉 정도전은 '경제문감'(經濟文鑑)에서 대간(臺諫)은 천하 제일의 인물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대관은 한마디로 단언하면 4~5류에 불과한 사람들"이라면서 "이런 자들이 기세등등하게 대간에 들어서 있으니 어떻게 일이 성사되었는가?"라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정도전은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아도 나라 안팎에서 이미 그들이 천하의 제일류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조선의 대관도 한때는 지금의 검찰과 감사원처럼 4~5류의 인물들이 늘어서 있었던 것이다.

정도전이 사헌부 관원인 대관(臺官)에 대해 가장 중시한 것은 위엄과 명망이란 뜻의 위망(威望)이었다. 정도전은 위망이 있는 자가 대관으로 있으면 종일토록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스스로 두려워 복종하지만 위망이 없는 자는 매일 백 번을 탄핵해도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망이란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다. 중국 송나라 때 소과경(蕭果卿)이 대관인 어사(御史)가 되자 승상 우윤문(虞允文)의 뜻에 따른 것이라는 소문이 났다. 소과경은 "우윤문이 자신을 가볍게 보고 어사를 주었다"면서 "나를 경멸함이 심하구나"라고 부끄럽게 여기고 가장 먼저 우윤문의 무기를 논박하자 사람들이 그 용기에 탄복했다. 이런 것이 바로 위망이고 자존심이다.

국민은 지금의 검찰을 힘없는 국민에

게는 없는 죄도 만들어 내어 구속시키면 서로 권력이나 재벌들에게는 있는 죄도 없는 것으로 만들어 풀어 준다고 보고 있다. 정윤회 문건 파동 때 검찰에 소과경 같은 인물이 있었다면 최순실 국정 농단이나 우병우의 권력 농단 사건 등은 존재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울곡 이이는 '석담일기'에서, "조광조가 대사헌이 되어 법을 공평하게 집행하니 사람들이 모두 감복(感服)해서 그가 밖으로 나가면 시장 사람들이 말 앞에 모여들어, '우리 상전(上典 : 주인)이 오셨다'고 말했다"고 기록했다. 조광조가 종종 때의 부패한 공신 집단에 맞서 법전대로 법을 수행했기에 힘없는 백성들은 그를 주인으로 여겼던 것이다. '연리실기술'의 '관직전고'(官職典故)는 사헌부 관원이 "정색하고 조정에 서면 모든 관료가 떨고 두려워한다"고 전하고 있다.

정도전은 '경제문감'에서 "어사는 남을 책망하는 사립이나 마땅히 자기 자신도 책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도전은 "어사가 스스로를 책망하지 않으면 천하의 책망을 얻을 것이다"라면서 "자신을 책망하기를 어렵지 않게 여겨야 남을 책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의 추상같은 사헌부 상(尙)은 자신과 힘 있는 자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힘없는 국민들에게는 한없이 가혹했던, 지금의 검찰로서는 감히 바라지도 못할 모습일 것이다.

광복 72년이 지난 지금까지 검찰의 비리를 수사할 기관 하나 없는 나라가 어찌 나라인가? 조선에서는 사헌부가 이런저런 사정으로 수사를 기피하면 사간원이 즉각 탄핵에 나서고, 지금의 공비처 격인 금부처가 즉각 사헌부 관원을 구속 수사했다. 사헌부의 권한은 막강했지만 그만큼 다른 기관의 견제를 받았다. 지금의 경찰 격인 포도청에도 수사권이 있었던 것은 물론이다.

지금 논의되는 공비처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명제에 비하면 너무도 당연하다. 하루빨리 공수처가 설치되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져 모든 기관들이 서로 견제하고, 그럼으로써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살아 있는 조항으로 만들어야 한다. <한기람역사문화연구소장>

社說

막 오른 '예산 전쟁' 지역 국회의원 분발음

내년도 정부 예산이 429조 원으로 확장됐다. 올해보다 7.1% 늘어난 사상 최대 규모의 '슈퍼 예산'이다. 광주·전남 사업비는 7조2836억 원이 반영됐다. 하지만 지역 예산 증가율은 1% 안팎에 머물렀다. 특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대폭 감액되면서 사업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18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28조4000억 원 늘려 확정하고 다음달 1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광주·전남 예산은 229건에 1조7803억 원으로 올해보다 0.78%(139억 원) 늘었다. 전남도는 769건, 5조5033억 원으로 1.6%(892억 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더욱이 정부 방침에 따라 SOC 예산이 전체적으로 20%나 삭감됐다. 광주·전남에서는 광주순환고속도로 2구간, 호남고속철도 2단계, 광주~완도 고속도로, 목포~보성 남해안 철도, 흑산도 소형공항 등 주요 SOC 사업비 대부분이 올해보다 큰 폭으로 감액됐다. 일부

사업은 아예 누락되거나 절반 가까이 잘려 나갔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낮았던 광주·전남 SOC 예산 반영률을 문재인 정부가 바로잡아 균형 발전을 실현해 주기를 기대했던 지역민들로서는 낭패가 아닐 수 없다.

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SOC 투자가 줄어들면 건설업 비중이 큰 지방 경제는 어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다. 도로와 철도·항만·공항 등의 신규 투자가 지연되면서 지역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는 오는 12월 2일까지 내년 정부 예산을 심의해 처리해야 한다. 3개월간의 '예산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다. 지역 예산 확보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조해 이미 반영된 예산은 지키고, 깎이거나 부족할 예산은 증액하며, 누락된 사업일지라도 꼭 필요한 사업은 살려 내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파트 공사장 소음·먼지 대책 마련해야

아파트 신축 공사장의 소음과 분진 등이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다. 신축 공사는 대부분 기존 주택가나 아파트 단지와 근접한 곳에서 이뤄지는 탓에 인근 주민들의 일상 속 고통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특히 수험생을 비롯한 학생들은 견디다 못해 도서관 등으로 피신(?)하는가 하면 주부들은 낮 시간대에도 하는 수 없이 카페를 찾아 해맨다.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신축 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 현장은 광주 14곳과 전남 7곳 등 모두 21곳이지만 이전에 공사에 들어간 곳을 포함하면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공사장에서는 소음·분진 및 공사 차량으로 인한 매연 및 통행 위험 등으로 인해 주민과 시공사 간 크고 작은 마찰이 일어나고 있다.

광주 남구 입암마을과 나주 송월동·여수 엑스포박람회장 인근 주민들은 소음과 분진·매연 등으로 여름 동

안 잠문 한 번 열지 못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목포시 산정동의 한 아파트 주민들 인근에 건설 중인 아파트의 공사중지 명령 처분을 요청하는 민원을 시에 제기했다. 그러나 자치단체들은 소음 등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 한해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 데다 그마저 강력한 제재가 아니기 때문에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공사를 하면 소음·분진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건설사와 공무원들의 태도가 문제다. 지자체는 아파트 공사 계획단계에서부터 공사차량의 안전한 진출입로 확보, 민원 방지를 위한 협의체 운영, 피해 발생시 지원 등을 시공사들이 지킬 수 있도록 행정 등으로 인해 주민과 시공사 간 크고 작은 마찰이 일어나고 있다.

광주 남구 입암마을과 나주 송월동·여수 엑스포박람회장 인근 주민들은 소음과 분진·매연 등으로 여름 동

無 等 鼓

'자본주의를 구하라'(Saving Capitalism)란 제목의 책을 펴낸 로버트 라이시(Robert Reich)는 자본주의를 위협하는 것은 현대사회가 성장과 안정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신뢰의 지속적인 쇠퇴, 즉 불공정이라고 꼬집고 있다.

그는 부유층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인상, 이를 국민이 잘사는 데 필요한 수단 학교와 수단 확충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난의 대물림과 함께

의 경쟁은 무모할 정도다. 학력고사에서 수능으로, 사법고사에서 법학전문대학원으로서, 교육·사법 제도의 변화 역시 이를 부채질하는 듯하다.

이름 전 미국과 유럽의 유명인, 부유층, 기득권층의 자녀가 시급 몇천 원 수준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기사가 화제가 됐다. 돈의 가치, 사회 전반의 분위기 등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한다. 자녀에게 지역사회

의 일원으로서 갖춰야 할 자세를 알려주는 속 깊은 배려이자

그들만의 문화일

것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고, 형량에 대한 논쟁도 분분하지만, 그가 할아버지·아버지·자신으로 이어지는 대물림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우리 사회의 폭대기를 구성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번 판결이 '반칙 대물림'을 경계하는 계기가 되고 그로 인해 우리 사회가 조금씩 더 공정해지기를 기대한다.

/윤현석 정치부 부장 chadol@

삶과 교육

학교 밖 청소년 마음 돌 곳을 만들어 주어야



이정선 전 광주교육대학교 총장

내가 오래도록 초·중등 교육복지 학교나 학력중점 학교, 사교육 절감 창의경영 학교 등의 컨설팅으로, 교육청의 각종 위원으로 교육현장을 다니면서 줄곧 생각한 것은 소외 학생들의 교육 문제였다. 학교 교육에 흥미를 갖지 못한 학생들에게 어떤 길을 찾아 주어야 할 것인가가 항상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우리 지역 고등학교 학생들의 교육 문제 역시 나를 줄곧 괴롭혀 왔던 문제 중 대표적인 것이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우리 지역 고등학교의 가장 큰 문제는 학적을 유지한 채 학교 내에서 원하는 것도 없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채 무기력하게 남아 있는 학생들의 교육문제와 어쩔 수 없이 학교를 그만두고 거리로 내몰리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삶이라고 한다. 전자와 관련해서는 지난 글에서 진로·진학이 모두 가능한 두 트랙(two track)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한 한 바 있다.

이제는 학교 밖 청소년들도 이룰 못지 않게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다. 광주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따르면 매년 1500여 명의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 밖으로 나온다고 한다. 2016년 작년 한해에도 1386명의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두었다. 이들은 왜 학교 밖으로 나가는지, 학교 밖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이들을 위한 대안은 없는지, 이러한 것들은 당사자들인 청소년들이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니라 우리 어른들이, 이들이 '내 자녀'라는 마음으로 반드시 함께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다.

청소년문제 전문가들에 따르면 중·고등학생의 경우 "왜 학교를 그만 두었나요?"라고 물으면 대부분 학생들이 "원하는 특성화학교가 없어서" "갈만한 학교가 없다. 후지다. 구리다. 원하는 곳이 없다."라고 대답한다고 한다. 특히 자신이 원하지 않은 특성화고의 학과에 진학한 학생, 성적이 낮아서 어쩔 수 없이 일반계고로 진학한 학생, 그리고 특수한 평준화 3개교의 학생들의 중퇴율이 가장 높다고 한다.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적 요구는 갈수록 다양해지는데 그나마 있는 특성화학교도 떨어지면 원하지 않는 일반고로 가야하고, 입시가 아닌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 자기가 잘하는 분야로 꿈을 꾸고 싶은데 다닐만한 학교가 없다." 즉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적응할

학교가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들이 학교를 그만두면 무엇을 하는가? 물론 일부 자발적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유학이나 홈스쿨링, 혹은 스드나 학원 등을 찾아서 자기개발을 하는 청소년들도 없지 않다. 그리고 일부 청소년들은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유관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대안학교를 활용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대안학교나 특별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지 않는 청소년들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시간제 알바를 하거나 피시방에서 시간을 보내든지, 아니면 범죄에 가담하는 청소년들도 적지 않다고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전체 청소년 범죄의 40%를 저지른다고 하니 얼마나 심각한 사회 문제인가.

학교를 떠나는 우리의 소중한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은 없을까? 우리 지역에는 현재 11개의 비인가 대안학교와 3개의 인가 대안학교 등에서 검정고시 교과 수업, 예체능활동, 민주시민 교육활동을 다양한 체험, 여행, 직업교육, 자기개발 프로그램과 함께 운영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성문화센터, 청소년활동지원센터, 청소년 삶디자인센터와 같은 청소년 특화시설 등도 상당히 갖춰져 있는 편이다.

문제는 많은 청소년들이 교육적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못하는 데 있다. 이는 시설 운영 기관인 시청과 학생들이 교육하는 교육청간 유기적 협조 체계가 필수적임에도 그러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여 정작 필요한 학생들에게 정보가 전달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자체와 교육청, 유관시설 간 적극적인 정보 공유와 유기적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져야 할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장기적으로는 학교를 그만 두기 전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는 다양한 학교를 만들어 내고 교육청도 내에서도 청소년의 모든 교육적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일반계고를 진로·진학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재검토하고 사회와 학생의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특성화고를 신설해서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는 특성화고를 만들어야 한다.

이미 학교를 그만 둔 후에는 개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힘들어 하거나 징후를 보이면 시도에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협력적 지원을 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마음 돌 곳이 없어서' 거리에서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위하여 우리는 '마음 돌 곳'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지역이 이들과 함께해야 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 핵심자원 공간정보 전문가 양성을

성 및 사회변화에의 대응을 강조한다. '지능+정보'기술의 제2차 정보혁명인 4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와 인터넷기반의 지식정보 혁명이라 할 수 있는 3차 산업혁명과 연속성을 갖는다. 정작 우리 사회에서 회자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인공 지능(AI), 가상현실(VR), 로보, 커넥티드 카(Connected car), 자율주행차, 빅 데이터(Big Data) 등의 핵심기술 중심의 사회·산업·직업구조 및 일자리의 변화상에 집중되고 있다.

지난 8월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미래 일자리변화와 평생직업교육' 포럼을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의 신생 직업으로 '진화하는 직업' 즉, 의미 있게 변화하는 책무를 포함하고 있는 직업들을 정의한 바 있다.

이는 곧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의 진일보를 지원할 수 있는 핵심자원과 관련한 직업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공간정보'(spatial information) 관련 전문 인

력의 지속적인 양성의 필연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공간정보는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정보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2조 제1호). 인공지능이 활용할 빅 데이터와 관련한 공간정보의 정확성, 커넥티드 카 혹은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 등의 기술 안정성 확보를 위해 요구되는 위치정보는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및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기반의 정밀도를 갖춘 디지털 지도(digital map)가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에서는 공간정보의 정밀도 품질관리를 위해 전국지적재조사사업(2012~2030), 국가 3차원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브이월드(V-World) 구축 및 고도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 대학 토지정보관리과도 호남 유일의 공간정보교육거점대학(2009~2012)교육사업 경험을 토대로 GIS, GN-SS, Drone, 디지털 지도 제작, 전국지역 재조사사업 등과 관련한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기반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은 '하이테크'(hightech) 집중적이며, 그 진화 속도는 점점 더 단기간화되고 있다. 이를 고려한다면, 'back to the basic' 즉, 공간정보와 같은 미래기술의 핵심자원을 관리하는 기본적인 직업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불확실한 미래 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유망 신직업 인재양성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교육 구성과 운영이야말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전문대학을 통한 직업교육의 강화를 기대하고 있는 김상근 교육부장관을 비롯한 정부의 바람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창·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열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다 지 인 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회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